

2부 역사와 균열

사 회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발 제

주제 3 : 한국 민주화운동과 반공주의 - 반공주의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 발제 : 김귀옥 (성공회대 연구교수)

주제 4 : 동아시아의 20세기와 미국,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 발제 : 이삼성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제 5 : 한국사회와 학생운동, 그 회고적 전망

- 발제 : 김정인 (한국 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

토 론

- 김일영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일준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

- 김정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 황인성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사무총장)

한국 민주화운동과 반공주의 : 반공주의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김 귀 옥(성공회대 연구교수)

1. 머리말

상전벽해(桑田碧海).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래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기에 이 단어만큼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해외에서 북한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친북인사'로 분류된 사람들을 만나기만 해도 국가보안법이나 구 반공법의 저축 대상이 되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는 변화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여 2000년 한 해 동안의 방북 성사 건수만 해도 1989년 이래로 총 2,209건 중 804건으로 36.4%에 달한다(통일부 교류협력국, 2000). 또한 미국 부시의 '악의 축' 발언 이래 한반도에 극도의 긴장이 고조되어 있지만, 2002년 한 해만 해도 12,825명이 방북하여 2001년 8,551명에 비해 49.9% 증가하였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는 북한 선수단뿐만 아니라 '미녀응원단'으로 이름을 떨친 응원단이 참여했고,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도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여함으로써 한반도의 변화를 전 세계에 과시하였다. 1998년 11월 금강산관광 길이 터진 이래 2003년에는 금강산육로관광에 이어 서울에서 직항로로 평양으로 관광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또한 2002년 12월 노무현의 대선 당선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개혁들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러한 일들이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반세기 이상 한반도는 세계적 냉전의 격전장이 되었다. 세계적 냉전이 가장 일찍 찾아와서는 미-소의 대리전으로 한국전쟁이라는 열전이 치러졌고, 1990년대 탈냉전도 비껴가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매카시선풍(Schrecker, 1994)의 시대였던 냉전의 1950년대, 진보적이거나 양심적인 교수들을 대학에서 추방하거나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 학문, 과학계가 재편되어 학문이나 연구에서도 중립이나 객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Chomsky et al, 2001).¹⁾ 그런 분위기가 분단정부 수립 이후부터 50년 이상 지속된 한국에서는, 진보적 학풍이나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가 사실상

1) 매카시즘을 미국의 냉전시절 대학과 지성계를 평정했던 사건으로 꼽을 수 있다면, 한국 대학과 지성계를 냉전질서로 평정했던 사건으로는 1946년 '국대안사건'과 1950년의 한국전쟁, 1970년대 긴급조치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질곡당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에야 새로운 싹이 틀 수 있었다. 1960, 70, 80년대 학교에서 내몰린 지식인들이나 학생들은 노동, 농민, 빈민, 여성 분야나 지역, 통일분야 등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회 각 부문의 모순 속에서 자생한 대중들과 함께 연대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학교에 없다' 고 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한 역량은 사회운동의 핵심적인 세력이 되면서 1987년 6월항쟁에 굵은 줄기가 되어 합류했다. 또한 6월항쟁으로 형식적 수준에서나마 절차적 민주화를 전취한 후 그 역량은 1980년대 중반까지 민주화운동의 중심축으로 성장해온 분야에서부터 신사회운동의 다양한 분야로 다시 분화되어 나갔다.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가 각축을 벌이는 시대가 열렸다. 분화과정에서 헤게모니를 쥔 일부의 시민사회 구성원은 정치사회로 편입되기도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소위 '색깔론' 이 붙어져 나왔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래로 1990년대에는 색깔론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보수 언론과 보수 세력이 선동하는 색깔론 시비에 걸려 과거 한완상 부총리가 잘려져 나갔고, 김정남 전 청와대 교문사회수석도 보수언론의 마녀사냥감이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최장집 대통령정책자문위원장 역시 그러한 사례이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 고영구 국정원장 취임 시비와 함께 서동만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도 색깔론 시비에 걸렸다.²⁾ 그러한 사건을 치를 때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한편 자기 검열에 걸려 반공주의에 간혀 있는 무의식을 성찰하게 되었고, 그러한 교훈 속에서 좁은 인식의 틀을 좀더 넓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오랫동안 시비의 대상이 되어온 '해외민주인사' 33인이 2003년 9월 19일 입국하였다. 또한 9월 22일에는 독일의 송두울 선생이 귀국했고,³⁾ 50여 명의 해외민주인사도 속속 귀국하고 있다. '해외 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추진한 2003년 '한가위 해외민주인사 고국방문' 행사에 그간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던 해외민주인사들이 전격 입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들 속에는 30년 만에 귀국이 허용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도 있다. 한통련은 1973년 8월의 '김대중납치사건' 과 관련하여 한국의 반유신운동을 지퍼 올린 혐의로 친북반국가단체로 몰렸다.⁴⁾ 또한 이제는 고인이 된 윤이상 선생이 연루된

2) 그러한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색깔론 시비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레드 콤플렉스, 학문의 자유" (학술단체협의회 주최 『한국전쟁, 어떻게 끝낼 것인가』(2000.6.3))를 발표하였다.

3) 송두울 선생은 2002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가 추진한 국제학술심포지엄 "한국민주화운동의 전개와 국제적 위상" 에 발표자로 초청된 바 있으나 관련 당국의 불허 방침에 따라 초청이 취소된 바 있다(『한겨레신문』 2002. 10. 11).

4) 2003년 8월 13일, '김대중선생납치사건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의 모임' (공동대표 윤순녀, 한승헌)은 『김대중선생납치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한·일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소위 '동백림사건'⁵⁾이나 유럽이나 일본 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각종 한국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은 일단 '친북'이라는 딱지가 붙여지면 재고의 여지없이 민주화운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앞으로 수많은 시국사건 관련자들이 복권이 되게 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역사적·학술적·법적 재조명도 불가피해질 것을 보인다.

2003년 9월, 이들의 한국 방문과 함께 '해외민주인사'로서의 재규정은 앞으로 국내외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조명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간 민주화운동의 규정 범주가 다소 절차적 민주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 민주화운동의 범주와 성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반공주의에 의해 배척당해왔던 운동이나 시국사건들이 재조명되고, 재해석될 여지가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 민주화운동 속에서 반공주의는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성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반공주의의 핵심인 반복주의가 한국현대사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반공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반공주의와 반복주의의 긴 인연의 변천과정에서 빚어진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글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반공주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새로운 시도로서 동시대인들의 반공주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동시대인의 반공주의 인식

혹자는 반공주의는 한국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또 혹자는 모습만 바꾼 채 살아있다고 한다. 이러한 평가에는 반공주의에 대한 상이한 정의,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동시대인 속에 반공주의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는 흥미로운 주제이고, 그러한 반영을 단초로 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동시대인들의 반공주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임의의 지식인, 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03. 8. 26-9.5

5) 동백림(동베를린)사건, 즉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대남적화공작단 사건'으로 "1967년 5월 6일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한 대남적화공작단 임석훈 외 일당 25명을 검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자 41명을 검거하였다"고 중앙정보부는 기록하고 있다(중앙정보부, 1973: 439).

- 조사 응답자의 구성

분 류 명	성 별		연 령 별				직 업 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방송,언론인	사회운동가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11	11	2	8	9	3	3	2	4	14

- 조사 항목

- 반공주의에 대한 정의
- 반공주의에 대한 역사적 평가
- 반공주의와 반북주의와의 관계
- 반공주의와 민주화운동과의 관계
- 반공주의와 노동운동과의 관계
- 반공주의와 통일운동과의 관계
- 반공주의와 가부장제와의 관계

- 조사 방식 :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자유롭게 판단하여 기입하는 '개방형' 설문 형식

2) 조사 결과 분석

설문지는 조사 항목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나름대로 고민해 보지 않았다면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친 조사이지만, 응답자들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였으므로 자기 방면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반공주의를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나름대로 소화하여 응답하였다고 본다. 특히 응답자의 다수를 점하는 3,40대의 경우, 개인차는 있지만 대개 어린 시절부터 반공을 국시로 하는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아 초기 사회화과정에서 반공주의가 내면화되었을 것이며, 자의식이 싹트는 과정에서 반공주의를 의문시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단 응답자 22명에 대해서는 A1, A2, A3의 식으로 익명처리하기로 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정리·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반공주의에 대한 정의

피조사자들의 반공주의에 대한 정의는 크게 다르지 않은 편이다. 대개 반공주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이나 이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 반공주의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배자들의 지배의식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허위의식' 이다.

둘째,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이념적으로 억압하고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데올로기" 이다.

셋째, 반복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있다.

넷째, 서구의 반공주의는 자본주의 성장과 함께 자유주의를 근거로 하지만, 한국의 반공주의는 봉건주의, 보수적 자유주의를 결합한 통치이데올로기이다.

인식에 있어서 개인적 편차는 있더라도 대개 한국의 반공주의를 서구의 반공주의와는 일정한 차이를 두고 바라보고 있고 반복주의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② 반공주의에 대한 역사적 평가

다음으로 반공주의의 역사적 평가를 물었다. 우선 반공주의가 역사적으로 기여한 바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가 "없다"고 일축하였다. '혹시 있다면' 이라는 가정에 대해 인류가 극복해야 할 '냉전'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다거나(A6) '자유'의 소중함을 환기시켜주었다'(A11)는 점을 들어 간접적 교훈을 들었다. 또한 지배집단의 입장에서는 국가동원이데올로기로서 체제를 안정시키고, 권력을 유지시켜 주거나(A7) 경제발전과 압축적 성장을 일부 가져온 점(A3, A4, A13, A20) 등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민중의 입장에서는 반공주의의 역사적 기여를 재고할 여지가 없는 대신 지배집단의 입장에서는 국가동원이데올로기로서 통치이념이나 압축적 경제성장에 일부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음으로 현대사에서 반공주의의 부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반공주의의 역사적 평가

종분류	항 목	응답자
정치 경제적 수준	군부독재정권을 장기 지속 가능하게 했다	A1, A5, A10, A14, A17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A1, A2, A4, A13, A17, A20, A21
	국가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친미사대주의를 심화시켰다	A2, A4, A13, A18, A22
	군비 확대를 가져왔다	A14
	북한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분단을 고착시켜, 통일에 장애요인이 되었다	A2, A5, A7, A7, A9, A12, A13, A21, A22
	경제적 불평등을 은폐했다	A13
	진보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이다	A10, A17, A20
사회 문화적 수준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시민권, 인권 등을 박탈했다	A1, A2, A3, A4, A6, A11, A16, A18, A19, A21, A22
	시민사회발전을 지체시켰다	A1, A8, A14
	과거청산을 좌절시키고, 현대사 왜곡을 심화시켰다	A4, A6, A12, A14, A18
	군사주의 문화와 획일주의 문화를 심화시켰다	A15, A17, A19
	지역차별주의를 낳게 한 주범이다	A1

응답자의 응답을 12가지로 분류하여 이를 정치·경제적 수준과 사회·문화적 수준으로 중분류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반공주의는 한국현대사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고 통일을 저해하는 주범이다. 현대사에서 부정적인 역할은 한 것을 정치·경제적 수준에서 보면 통일에 장애요인이 되었다는 것에 응답이 가장 높고,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응답이 다음으로 높다. 다음으로 군부독재를 위한 통치수단이고, 친미사대주의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국가보안법을 통하여 시민권과 인권을 침해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과거청산을 지연시키고 현대사를 왜곡시켰다고 응답하였다.

③ 반공주의와 반북주의의 관계

반북주의(反北主義)는 용어만으로 보면 '북한을 반대하는 주의나 이념'으로서 반공주의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응답자들에 있어서 그들의 관계를 다르다고 보는 사람은 9명이고, 동의어이거나 비슷하다고 본 사람은 13명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다르다고 본 경우에도, 반공주의와 반북주의의 적용 범위가 다르지만 한국적인 맥락에서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남에서 반공이데올로기는 반북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있다고 본다.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후 초기에는 반일, 건국 사상의 기본은 사회주의사상이었으나 미국의 대남정책과 반동적 이승만 정권, 그리고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반공이데올로기가 반북이데올로기와 결부된 형태로 형성, 침투했다고 본다. 이남의 반공이데올로기의 본질은 독재와 학살 등 만행에 대한 공포심이라고 본다(A5).

다만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세계적 탈냉전 과정에서 둘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소수의 지적도 있다.

탈냉전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가 많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북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6·25전쟁의 경험, 각종 안보위기상황 등으로 인해 북한이 남한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A16).

다시 말해 국제적 수준에서는 탈냉전 속에서 반공주의가 현저히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수준에서는 반북주의가 반공주의와 자립된 채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④ 반공주의와 민주화운동의 관계

다음으로 반공주의와 민주화운동과의 관계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역비례'의 관계로 보는 데 이견이 없다. 즉 반공주의가 강할수록 민주화는 억압되었고, 반공주의가 약화될수록 민주화는 신장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바탕을 두고 성장한 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한국의 반공주의는 '다원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A2, A3). 이러한 이유로 반공주의의 제도적 표현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질곡하는 주범이 되므로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⑤ 반공주의와 노동운동과의 관계

반공주의와 산업화 또는 노동운동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산업화와 노동운동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화는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노동운동을 방해하며 진행되었다(A1, A6, A9, A10, A13, A15, A18, A21). 한편 산업화와 반공주의 자체는 상관관계가 없으나 국가발전이데올로기, 노동동원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산업화와 반공주의가 결합되었다고 보는 인식도 있다(A1, A3, A4, A6, A10, A16, A21, A22). 그 결과 산업화는 경제성장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한 반면(A13), 중산층의식을 확산시키며, 노동계급의식을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A5).

⑥ 반공주의와 통일운동과의 관계

앞의 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반공주의와 통일운동과의 관계는 상극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반공주의는 분단을 고착화시키거나 반공에 의한 통일의 길만을 열어둠으로써 민족 전체가 바라는 통일을 가로막아왔고, 그 결과 통일운동을 저해하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다. 따라서 통일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공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 사례를 보면,

반공이데올로기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타도의 대상으로 흡수통일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남북의 상생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는 민간 통일운동과 상극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김대중 정부가 북한과의 햇볕정책(절반의 화해정책)을 구사했으나 국가보안법을 온존시킨 채(즉 반공이데올로기를 지양하지 않은 채) 운용하는 바람에 퇴색할 수밖에 없었다(A1).

즉 반공주의는 민족 전체가 지향하는 통일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문제 인식들은 다르지만, 비슷한 결론을 갖고 통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음과 같은 견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공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세력이 북한과 교류하면서 통일을 지향한다면, 자본가 블록이 경제적 이윤추구의 영역 확대로서 북한을 접근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북한 노동자는 자본운동의 매뉴얼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 효과는 북한 노동자로 하여금 배금주의에 물들게 하고 '사회주의' 가치를 의심하거나 폐기하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다(A18).

반공주의에 기초한 흡수통일을 자본주의의 확대로 이해하고 있다.

한편 반공주의와 통일과의 관계에 대한 지적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 논의 중 하나가 반공주의와 민족주의의 관계이다. 통일은 민족주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다면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반공에 기초한 통일론을 이해하는 문제와도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반공주의는 상황에 따라 민족주의를 동원해 왔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김정훈, 1999; 김정훈·조희연, 2003). 그러나 반공주의는 근본적으로 지배이데올로기일 뿐만 아니라 분단을 기초로 하므로,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민족주의와 양립하기는 어렵다. 한 예로 박정희 정권하에서 절대적 통일론을 주장한 민족주의자 장준하는 반공주의에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박정희의 민족주의론은 분단국가주의(강만길, 1999)로 보는 것이 설득력 있다.

⑦ 반공주의와 가부장제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반공주의와 가부장제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는 한국 가부장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선행적인 문제의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앞의 세 가지 질문에 비해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은 편이다.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 응답은 11명이고, 이 가운데 여성은 6명이다. 대개 두 가지가 인과적 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는 있다는 지적이다. 즉 반공주의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가부장제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결합하여 가부장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인용구가 다소 긴 감이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반공이데올로기는 가정과 사회에서 가부장제를 강화시키는 기제로 사용되

는 경향이 있다. 특히 봉건적인 가부장제 가족 관계와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여성억압에 한층 기여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반공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한국사회를 지배한 봉건원리는 충효개념인데, 주로 '충'이 사회 영역에서 작동하였다면 '효'는 가정영역에서 작동한 남성중심적인 지배이데올로기였다. 충효 이데올로기는 상명하복의 폭력적인 군사주의 동원 및 명령체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질서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율곡을 매개로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부각된 신사임당을 역할모델로 삼도록 요구 당하였다. 실제 신사임당의 삶과는 차이가 있어서 상당한 역사 왜곡을 동반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정에 헌신 봉사하되 자녀를 합리적으로 잘 키우고 남편을 보필하는 똑똑하고 능력은 있으되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상-삼종지도-을 벗어나지 않는 '현명함'을 지닌 여성이 되도록 '강요'하였던 것이다.

또한 반공이데올로기는 봉건 원리와 결부된 군사주의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사회적으로는 여성을 동원하여 저임금의 노동력 착취를 당연시하였고, 가정적으로는 남편과 자식에 죽도록 헌신, 봉사, 복종하되 언제나 삼종지도의 부덕을 지닌 여성으로서 현명함을 잃지 않는 여성상을 강요하였다. 이에 가정폭력 지수가 세계 2-3위이고, 남편의 외도율이 높아도 이혼문제를 여성이 제기할 수 없었다(A8).

이 설명은 반공주의를 설명하는 것인지, 가부장제 자체를 설명하는 것인지 혼동되는 경향은 있다. 한국 반공주의의 원형이 형성되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 수출주도정책의 산업화전략하에서 어린 여성노동력을 동원하여 저임금·장시간의 착취를 하면서 노사관계의 모순을 반공주의에 의해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반공주의와 가부장제는 절묘한 조응을 할 수 있었다.

서구의 반공주의를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배태되어 합리성에 기초한다고 전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반공주의와 동전의 양면으로 공존하는 '보수주의' 역시 가부장적 성격⁶⁾을 갖고 있다 (서병훈, 1999: 65-66).

이상과 같은 반공주의에 대한 개략적인 설문 조사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사실 중의 하나는 한국의 반공주의가 명확한 이념 체계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이다. 또한 반공주의가 민주화

6) 보수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수주의 이론에서 정치는 '자연이 내린 지도자'의 몫으로 간주된다(서병훈, 1999: 65). 따라서 소수 엘리트 중심의 정치관과 동일시되어 보수주의는 다원론적 정치관으로서의 자유주의와 모순적인 공존을 하고 있다.

운동이나 통일운동과 상극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논리적인 수준의 반공주의와 한국 현실 속의 반공주의는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의 한가운데 반복주의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한국 반공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조우하게 된 반복주의로서의 반공주의가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어떤 변천을 겪게 되는지 조명해 보도록 한다.

3. 한국현대사와 반공주의 변천 과정

한국 사회에서 반공주의의 역사는 반복주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 반공주의의 한국적 특수성이 반복주의로 나타났다. 반공주의는 한국 사회의 세계사적 보편성과 특수성에 조응하여 한국에 사회주의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현재까지 몇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그 단계를 우선 한국에 반공주의가 도입되는 단계, 둘째, 반복주의가 반공주의를 대변하는 단계, 셋째, 반공주의와 반복주의의 부정합 단계, 마지막으로 현재의 반공주의와 반복주의의 결별 단계로 나누어보고자 한다.

1) 한국에 반공주의가 도입되는 단계

한국에 반공주의가 도입되는 것은 식민지 시대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반공주의의 주된 대립물이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이라는 점이다. 식민지 조선에 그것이 도입되는 것은 서구 자본주의 발달과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조선시대 말기, 강화도 불평등조약을 전후한 시기 유통구조가 변화되고 상업이 일정정도 활성화됨에 따라 자본주의의 맹아가 싹트게 되었다(강만길, 2000). 곧 이은 일제 강점기 자본주의는 1930년대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화 정책에 힘입어 파행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1930년대 적색노조운동과 적색농조운동의 주도하에 노동자 파업과 농민소작쟁의가 일어났다.

그러한 가운데 일제는 1920년대 말경부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조선인의 투쟁을 부차화시키고 계급간의 대립을 전면에서 부각' 시켜 '민족해방운동을 무력화' 하고자 반공반소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시작하였다(정영태, 1992). 1930년대 일본의 대륙침략 기도가 명시화되고 내선일체정책이 더욱 억압적으로 전개되면서 국내 민족개량주의자들의 대부분은 독립운동에서 이탈하였다. 그 시기 만주지역에서 발생한 항일무장투쟁에 대해서 일본은 민족해방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불식시킨 채, '공비', '토적', '비적'의 '비적질'로 폄하시켜 그들을 민중과 이간질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일제는 치안유지법과 같은 법, 제도를 통하여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 사상을

탄압 및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제시기 사회주의 운동은 민족해방투쟁과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반공반소이데올로기 공세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정당성은 해방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되었다.

2) 반북주의가 반공주의를 대변하는 단계

이 단계는 비교적 긴 시간 지속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형성되어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를 조금 세분해 보면, 제1기는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시기에 해당된다. 미군정과 초기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와 민중의 이념이 부조화를 겪던, 이념의 스펙트럼상 좌편향 시기(손호철, 1991)로서, 반공주의가 큰 영향력이 없던 시기이다. 그 시기에 지배층은 일제 말기의 반공반소이데올로기를 그대로 가져오되, 토지개혁을 포함한 소위 '민주개혁' 과정에서 북한을 탈출한 '서북청년회'와 같은 월남인들을 이용해 반공이념을 전파하며 민중적 요구와 정면 대치 상황을 맞게 된다(이경남, 1989; 김귀옥, 2002[1999]). 월남인 청년들이 별동대가 되어 해방 공간의 민중적 요구를 '공산주의적 혁명노선', 적화노선 등으로 매도하며 반북 감정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전쟁시기에 유포·확산된 '가짜 김일성설'⁸⁾은 최근까지 반북주의의 정수를 이루게 되었다. 1980년대 말 김일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법정 공방⁹⁾속에서 가짜설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제2기는 한국전쟁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로서 반북주의가 반공주의를 대변했던 것으로 특징지어지고, 이 시기의 반공주의가 한국적 반공주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반공이 국시로 자리매김되면서, '반공병영사회'적 특성을 결합한 '반공규율사회(조희연, 1998)'의 전형이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폭력적인 반공주의가 1960, 70년대 이르러, 종래의 국가 폭력 기구를 제도화하고, 법제도적 기제를 갖추며 지배자의 이념이 곧 지배이념으로 되었다. 그 시기 한국에서 공산

7) 1930년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는 그러한 기사가 종종 실렸고, 1937년 6월 5일자 호외판에 '김일성일파'가 주도한 '보천보전투'가 실렸다. 동아일보는 호외판을 순금으로 도금하여 1998년 10월 방북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한 바 있다.

8) '김일성 위조사'(1950)의 저자인 이복에 의하면 당시 "공보처의 발표라든가 (미국의 소리) 방송, 혹은 유엔의 기상(機上) 삐라 등이 김일성이 위조인 것을 알리려고 무한 예를 쓰고" 있었다고 한다. 가짜설이 대중적으로 유포된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오영진의 '하나의 증언'(1952)이고, 학술적으로는 이명영의 저술이다. 자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홍구, "김일성 가짜설은 누가 퍼트렸나?"를 참조 바람. (<http://myhome.naver.com/redtiger7/kimilsung.htm>)

9)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승환, 소위 '이재화사건'이다. 김귀옥(2000)을 참고 바람.

주의 비판은 곧 북한에 대한 비판이었고, 나아가 김일성 비판으로 귀결되었다. 『원전공산주의 대계』의 서문에서도 밝혀진 바처럼,

김일성 공산집단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이 국공합작의 쓰라린 전철을 절대로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공산주의를 알아야 한다. (……) 그래서 공산주의의 침략성·기만성·허위성을 적나라한 생자료 그대로 전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북한 공산집단과의 대결에서 이념적·물질적·제도적으로 우위성을 계속 확보하여 조국의 평화통일 위업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사명감을 느끼고 우리 연구진은 이 책의 편찬에 착수하였다(극동문제연구소, 1984)

반공, 반소주의를 부르짖었지만, 1960년대 후반까지 이데올로기로서 내용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1960년대 말, 특히 1968년에 발생한 김신조사건으로 악명을 떨친 1·21 무장공비침투사건, 프예블로호 북한나포사건, 미군 정찰기 나포사건 등은 반공을 넘어 “멸공만이 살길이다”를 부르짖도록 했다. 그 무렵에 반공·방첩 계몽을 하는 양서로 가장 적합한 책자로서 파월전몰장병유족위원회가 펴낸 『방첩독본』이 나오고 1960, 70년대 명언으로 “간첩 신고는 전화 113으로!”가 소개되면서 다음과 같은 사람이 간첩으로 명시되었다.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6.25때 피로 의용군 기타에 부여하였거나 행방불명, 또는 납치되었다가 최근에 나타난 사람
- ② 장기간 행방불명되었다가 갑자기 나타난 사람
- ③ 미화(달러), 또는 일화를 은닉, 혹은 바꾸는 사람
- ④ 밤 12시 이후에 북한 방송을 듣는 사람
- ⑤ 남몰래 무전을 치는 사람
- ⑥ 돈을 많이 써서 주민등록, 시민증, 도민증 발급 등을 의뢰하는 사람
- ⑦ 과거 공산당에 부여한 사람과 남몰래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
- ⑧ 군사 및 경찰의 기밀을 탐지하려는 사람
- ⑨ 일본 밀항자로서 출처 불명의 많은 돈을 가지고 귀국한 사람
- ⑩ 계절과 유행에 맞지 않는 양복을 입은 사람
- ⑪ 새벽, 또는 야간에 산에서 내려오거나 해안을 배회하는 사람
- ⑫ 지주 주거를 이동하고, 수시로 변장하는 사람
- ⑬ ‘동무’ 등 좌익 용어를 무의식 중에 사용하는 사람
- ⑭ 정부 시책을 은근히 비난하고, 복귀를 지지·찬양하거나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사람
- ⑮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파월전몰장병유족위원회, 1968)

같은 해 12월 5일에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국민교육헌장’이 제정·공포되어 통치이념으로서 반공주의는 굳건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1968년 질서’는 1972년 유신체제와 결합하면서 반복주의를 반공주의로 완벽하게 대체하였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직후인 7월 10일에는 문교부가 남북공동성명 발표에 즈음한 교육태도 확립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선 학교에 하달하였다.

(……)이 시점이야말로 진정한 반공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절감되므로 다음에 따라 확고한 신념으로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 사회질서 문란과 반공사상의 해이가 예상되는 바, 학생과 지역사회 주민선도에 힘쓸 것(김진경, 1988: 68)

급기야 1970년대 중반부터 문교부는 반공 관련 내용을 일반교과서에 반영하고 반공교과서의 학교별, 학년별 계열성 강화를 위한 보완 및 정비 작업을 실시하며, 교교입시에 10%이상의 반공 관련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고 대학입학 예비고사에도 반공 내용을 중점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반공 전담 교사 및 장학사의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반공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김진경, 1988: 70). 그러한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소위 ‘국민윤리과’를 출범시키기도 하였다.

그러한 분위기는 1980년대 중반에도 지속되어 각급 학교들은 ‘반공종합행사’¹⁰⁾라 하여 각종 반공관련 행사를 시행하였다. 주로 반공응변, 반공글짓기, 반공포스터, 반공그림그리기, 반공표어짓기 등의 부문으로 나뉘어 6월 하순이 되면 며칠간 시행하곤 하였다. 수시로 반공연사의 강연회도 개최되었다.

또한 이승복과 같은 어린이 반공 영웅이 조선일보와 같은 언론에 의해 창조되었고, 반공어린이 이승복기념사업회에서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 고 이승복 어린이 반공실기』(1969)가 출간되었다. ‘송공문고’ 또는 ‘반공교육문고’ 등이 출간되어 어린이들에게 보급되었다. 또한 1970년대 후반의 어린이라면 잊을 수 없는 명화, 『똥이장군』이 본격적인 반공만화로 김창기감독¹¹⁾에 의해 제작되었다. 『똥이장군 제3땅굴』(1978), 『간첩 잡는 똥이장군』(1979)에서 북한 주민은 불쌍한 동물들로, 수령은 가면 쓴 돼지로 등장하여 어린이들의 정서 깊숙이 반공주의를 내면화

10) 반공종합행사는 1989년경이 되면 5차교육과정제에 따라 ‘통일안보 종합행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1996년경부터는 응변 부문이 ‘나의 주장’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시행되었다.

11) 김창기 감독의 작품 중 일본의 『마징가Z』에 대항하여 만들어진 작품인 『로봇트 태권브이』(1976년)는 당시 28만명을 동원하면서 흥행에 성공한 한국만화영화이다(『스포츠투데이』, 2003.8.24).

시켰다.

반공주의의 절정기에 일어난 사건으로는 1986년의 '금강산댐' 사건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은 서울지역 1987년 고입 연합고사 도덕문제 중의 하나이다(박준성, 1992 재인용).

북한공산집단이 금강산댐을 건설하는 저의는?

(1) 홍수 억제 (2) 군사적 이용 (3) 농업용수 (4) 관광자원 개발

지금이라면 모르겠지만, 당시 중학교 3학년생 치고 이 문제의 정답을 모를 학생은 얼마나 되었겠는가? 1986년 10월 30일 이후 전국민은 '200억톤 물폭탄'¹²⁾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¹³⁾ 즉 북한이 건설할 금강산댐의 수문이 열리면, 강원도 일대는 고사하고 서울 63빌딩의 허리 밑이 잠기게 된다고 하는 발표는 서울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공포는 당시 선정적인 언론에 의해 더욱 확산되었다. 그 덕분에 금강산댐의 대응댐으로서 '평화의 댐'을 쌓기 위한 성금 모금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은 불과 2년 만인 1988년 5공청문회에서 허구로 드러났다. 150억 톤 규모의 댐을 쌓는데 20톤짜리 트럭 1천대가 13년 동안 흙을 퍼 날라야 하고, 그 댐에 물을 채우는 데 다시 14년이 걸린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실제로 88올림픽 방해가 목적이라던 금강산댐은 2001년에야 완공됐고, 규모는 5억 톤에 불과했던 것이다.¹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 대부분의 민주화운동은 진상과 상관없이 정권에 의해 좌경으로 매도되기 십상이었고, 관련자는 빨갱이로 낙인찍혔다. 1970년대 민주화세력들은 북한과의 거리를 분명히 두는 문구를 성명서나 운동구호 속에 삽입시키기도 하였다. 1977년 서강대학교의 어떤 선언문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북괴는 학생들의 순수한 외침을 정치적 목적으로 기만하지 말라"¹⁵⁾

12) "200억 톤 물폭탄의 진실-금강산 댐 사건" (문화방송 창사 40주년 특별기획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01. 7. 20일 방영).

13) 이규효 당시 건설부 장관이 '북괴'가 이제는 댐을 쌓아 '물침략'까지 감행하려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그는 "북괴가 쌓은 '200억 톤의 물을 담은 거대한 금강산댐이 무너질 경우 화천 이남 5개댐을 순식간에 차례로 파괴하면서 한강하류 전역을 염습, 강원 경기 서울을 포함한 한반도의 허리 부분을 완전히 황폐화하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재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박준성, 1992).

14) 『한겨레』 2002.3.2. 제2의 금강산댐 소동은 2002년 4월28일 한국방송 "뉴스9"이 미국 위성이 촬영한 금강산댐 사진을 근거로 "댐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조선일보』 등이 진상 규명도 되지 않은 채 부풀리기 보도를 한 데서 비롯되었다.

15) "서강대학교 제3차시위 선언문" 중에서(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엮음, 1987: 1884).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반북주의가 사실상의 반공주의로 대변되면서 반공주의는 극성기를 맞았다. 이 시기에는 정치민주화운동을 비롯하여 지식인, 노동자, 빈민, 학생들이 중심이 된 수많은 국내 민주화운동과 해외민주화운동도 발생하였다. 그러한 운동의 진위와 상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반북·반공주의에 희생당하였고, 그러한 희생을 통해 반공주의의 허위를 폭로하였다.

3) 반공주의와 반북주의의 부정합 단계

이 단계는 1980년대 중,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의 짧은 시기이다. 이 시기 반공주의가 반북주의와 부정합을 이루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구 소련에서 시작된 페레스트로이카로 동서냉전 질서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된다. 소련의 핵무기 폐기선언에 따른 미소 간의 군비확충 경쟁이 악화되면서 세계 탈냉전의 기류가 형성되었다. 또한 분단국 독일, 예멘이 통일을 달성하였다. 소련의 붕괴는 많은 지식인들에 의해 이데올로기의 종식이 선언되었고, 자본주의는 일방적 승리의 개가를 올렸다.

50년 가까이 냉전의 고도였던 한반도에 서서히 탈냉전의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었다.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나 사회주의 국가들의 실상이 생생하게 알려지면서 더 이상 사회주의 이론이나 공산주의 사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1980년대 중반 3저 호황으로 소위 '서울의 기적'을 이룩하며 아시아의 4마리 용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부풀려지며 남한은 북한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게 되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노태우정권은 한편으로는 북방외교에 의해 소련, 중국, 동구 여러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1991년 가을에 남북 분리 동시유엔가입을 하였고, 1991년 12월 13일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채택되었다. 이제 남한은 북한을 빨갱이의 반국가단체 규정에서 동족의 나라로 재규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계기의 마련은 국내정치적으로 1987년 6월항쟁에 의해 군부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선 정부를 수립하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과 직결되어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새롭게 형성되면서 시민권, 인권 개념이 살아나고, 헌법적 자유 개념에 대한 대중적 각성이 확산되어 갔다. 일종의 특권적 자유로서 학문의 자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자유인 사상의 자유 개념에 대한 인지도도 형성되어 갔다.

6월항쟁 당시 1970년대 민주화운동 주축과는 다른 새로운 주체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서구, 특히 미국의 민주주의와 서구의 합리성을 한 축으로 하면서도 또 다른 축으로는 맑스·레닌주의나 민족해방이론 등을 운동의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사회과학' 학습이

나 ‘현대사바로알기’, ‘북한바로알기운동’ 등이 적지 않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사이에서 전개되었다. 과거에 종속이론이나 방송문건 등을 통해 맑스주의나 주체사상이 우회적으로 이해되던 분위기가 맑스, 레닌, 모택동, 김일성 등의 원서들이 학생이나 운동가들 사이에서 읽혀지면서 급전하게 되었다. 즉 분단 50년간 반공·반북주의에 의해 억눌려져 온 이념들이 선풍적으로 보급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과거에는 맑스·레닌주의를 주체사상과 동일시하거나 차이에 주목하지 않던 분위기가 바뀌어 양자의 차별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 일어난 많은 시국 사건 가운데 1991년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사건이나 1992년 실질적인 붕괴를 맞게 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조희연, 1992)은 관련 당사자들이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하되, 반복적 태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도 반북주의와 반공주의를 차별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간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문제가 ‘사회구성체논쟁’ 과정에서 선명해졌고,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은 차이점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자생 사회주의자이지만, 반북주의자가 생겨나게 되었다. 최근 많은 사회주의 분파들이나 다양한 진보주의자들이 국내에 뿌리를 내리면서 반복적인 입장을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국제사회주의자 “IS”로 불린다나 진중권(진중권, 1998)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그러한 점이 일부 지식인 사이에서 의사소통되었을 뿐, 대중에게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둘의 관계는 무차별적이었다. 1994년 여름을 달구었던 서강대 박홍 총장의 발언, 즉 “학생 운동권을 주사파가 지도하고, 그 뒤에는 사노맹이, 그 뒤에는 사로청¹⁶⁾이, 그리고 그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에서 그러한 무차별적인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밖에도 많은 시국사건의 검찰 당국의 기소장에서조차 사회주의=북한 추종 또는 이적 이념이라는 도식이 발견된다(김귀옥, 2000).

그러나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시국사건관련 피고인들이 “나는 —주의자가 아니다”는 문법을 구사했다면, 1990년대 이후부터는 “나는 —주의자이다”라는 문법 구사로 전환했음을 발견하게 된다.¹⁷⁾ 즉 과거 맑스주의=범죄라는 명제를 부정하고 보수나 수구를 비판하며, 나아가 사회모순과 민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한 것이다(서중석, 1997).

다시 말해 1980년대까지 사회주의나 혁명적 진보이념이 친북적 이념으로 해석되는 데에는 대중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모든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이념이 친북적

16) 사로청, 즉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을 1996년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함.

17) 이러한 문법의 구사는 사회운동의 대중성을 잃어버리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서중석, 1997)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축소되고, 그러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반공주의의 적용 범위와 반복주의의 적용 범위에 부정합이 생기게 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진보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1980년대까지 진보이념은 사회주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적으로 구사회적인 요소와 신사회적 요소가 착종되면서 진보이념은 더욱 다양화하고 있고 진보이념=사회주의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과거에는 사상의 국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깃발도 없고, 국적도 없는 사상이 충만하다. 예컨대 최근 대학생이나 지식인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었던 체 게바라를 추종하는 학생들이나 집단이 있다고 하여 그들이 볼리비아나 쿠바에 동조하거나 볼리비아나 쿠바의 이적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제 거의 마지막 남은 국적 있는 사상으로는 북한의 주체사상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체제 쟁경에서 승리한 남한의 입장에서 그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여 그 사상이 남한 체제를 위태롭게 한다거나 적을 이롭게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법적인 것을 논의로 한다면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반공주의나 반복주의는 더 이상 같은 대상에 적용되지 못하며, 현실적인 위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반복주의 인식을 지지했던 '빨갱이' 공포감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국민들에게 '색깔 콤플렉스'를 부추겼으나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반복주의 또는 반공주의의 약화라고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반공주의를 극복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은 아닐까?(권혁범, 2000: 146).

특히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은 반복주의적 사고를 대중적으로 희석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면서 이제 반공주의와 반복주의는 거의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과거의 지배의식으로서 반공주의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4) 반공주의와 반복주의의 결별 단계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에서만 아니라 남한 내 북한 인식에 있어서 과거와 선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다.¹⁸⁾ 이제 북한은 더 이상 빨갱이의 나라로서 전복시키거나 박멸시켜야 할 타자가 아니다. 1970, 80년대만 해도 멸공적 이념으로 무장한 반공주의는 국시였

18) 과거 일파암적(monolithic), 즉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인식이나 북한 사회 인식에서 이중사회로서의 인식 전환이 공론화된 것은 1990년대 중반이다. 서재진의 『또 하나의 북한사회』(1995)가 대표적인 저서이다.

고, 지배의식이었다. 1998년 이래로, 특히 가시적으로 2000년 이래로 흡수통일론을 포기하건 아니건 더 이상 국시로 반공주의가 정당시되지 못하게 되었다.

2003년 3월 1일나 6월 25일, 8월 15일의 '반핵반김국민대회'의 시청 광장 시위는 흔하던 1970년대 반공궐기대회보다도 더 격렬하고 비장한 분위기였다. 참가한 5, 6, 70대 군중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 미국 만세, 유엔 만세"를 외쳤다. 3월 1일 오자복 이북도민회장은 "대한민국에 좌익, 우익, 보수, 진보는 없다. 민족 반역자 김정일과 싸우는 애국과 반역이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편에 서면 애국, 김정일 편에 서면 반역이다"라고 절규하였다. 8월 15일, 이철승 자유민주민족회의 상임의장은 "거국적인 경축대회를 열어야 할 오늘 해방 정국 이상으로 반미친북 좌익세력이 발호해 국론이 분열되고 좌우가 갈라져서 기념대회를 갖게 된 것을 통탄한다"고 일갈하였다. 곧 이은 연사들도 "제2의 독립운동"으로 궐기할 것을 당부했다.¹⁹⁾ 그들의 모습 속에서 맹목적인 반복주의를 발견할지언정, 과거 1980년대까지 지배의식을 독점하였던 지배자로서의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더욱이 사회주의사상의 하나인 주체사상과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반공주의적 태도는 전혀 찾기 어렵다. 오직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 반복 감정만 남아 있을 뿐이다.

한편 2002년 8월에는 그러한 반복주의의 지위를 위태롭게 한 중요한 사건이 조용히 진행되었다. 반복주의의 진수였던 김일성가짜설과 그에 연동된 김일성 항일 활동 가짜설을 뒤엎는 일이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발생한 것이다. 김일성의 대표적인 항일무장투쟁 사례로 손꼽히는 '보천보전투'가 김일성 이름은 빠진 채 역사 교과서에 정사(正史)로서 서술되어 있다.²⁰⁾ 예의 『조선일보』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²¹⁾ 그러나 경향신문은 "보천보 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진작 남한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극심한 냉전이테올로기로 인해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것은 물론 공식인정은 금기가 되어 왔다. 반쪽 역사에 대한 맹목으로는 진정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다"고²²⁾ 보도했다.

보천보전투를 대하는 남측 전문가들이나 언론도 더 이상 맹목적인 반복주의적 시선이 아니다. 2001년 8월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방명록' 파동 당시에 보였던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의 맹목적인 반복 감정은 곧 이성적인 대응에 의해 자정되어 갔다. 이러한 분위기는 남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²³⁾ 또한 2002년 서해교전과 같은

19) 『월간말』 2003. 4월호, 9월호.

20) 『연합뉴스』 2003. 8. 6

21) 『조선일보』 2002. 8. 15

22) 『경향신문』 2002. 8. 8; 『미디어오늘』 2002. 8. 23

실전 상황에서 과거였으면 당장 국가보안법의 대상이 되었을 '연평총각'의 발언이 서해교전의 원인을 냉정하게 바라보게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²³⁾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180 돌아, 친북자들의 세상이 된 것은 결코 아니다. 권혁범(2000)의 지적대로 반공주의는 더욱 세련화되고 합리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의미에서 혐공, 염북적인 인식이 과거의 반복 감정을 대신한다. 다시 말해 반복 감정에는 '꽃제비'로 상징되는 시선, 계급차별적 태도가 혼재하고 있다.²⁴⁾ 그래서 반복주의는 더 이상 과거의 반공주의가 아닌 반복 감정일 뿐이다. 이러한 반복 감정은 과거의 공포감의 상징으로서의 '빨갱이'와 그에 기반한 반복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한편 현재의 북한 인식을 과거의 반복주의와 거리를 만드는 데에는 '동족의식'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황석영의 『사람이 살고 있었네』가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 되었듯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족으로서의 발견 자체도 불온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북한 사람들을 동족이라고 했다고 하여 국보법에 저촉되는 시대는 다시 돌아오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세련화된 반공주의는 무엇일까? 또한 2002년, 2003년 촛불시위를 이끌었던 10, 20대 청년대중들의 인식 기저에는 무엇이 깔렸을까? 그들의 인식을 과거 386세대들의 인식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김귀옥, 2003가). 21세기 우리 사회에 작동하고 있는 진보적 이념은 한국이나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역사 진행방향 내에서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물음으로 독해된다.

다시 말해 합리성과 자율성의 작동이 진보이념의 축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한 인식 틀 속에서는 제도화된 차별기제와 시장을 당연시 하고, 국가와 계획, 집단에 대한 혐오감이 짙게 깔려 있고, 자율성과 개성을 중시하고 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정부적이며, 자본주의의 기본 도식에 간혀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나와 다른 세계나 사람을 폄하하거나 혐오하는 인식이 자라고 있다. 민족적 인식이나 계급적 인식, 젠더적 인식 등은 다양한 패러다임 속의 하나로써 경쟁할 뿐 주도권을 잡지는 못하고 있다. 당대 최고의 가치이자 이념은 (신)자유주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현재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이 반공주의를 대체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 인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꾼다.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화운동이다.

23) 한 예로서 그 사건 이후 북한에서는 남측인사들에게 방명록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심지어 한때 방명록 자체가 사라지기도 했다. 『연합뉴스』2002.1.4

24) "제철 만난 꽃게 더 잡을 욕심에 우리 어민이 한계선 침범, 화 불러" 『오마이뉴스』2002.7.3

25)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경험하는 첫 번째 태도는 남한사람들의 계급차별적인 태도이다. 김귀옥의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안과 통일방안 모색" (『한국사회과학』2000년 제22권 3.4호) 참조 바람.

4. 민주화운동 속의 반공주의 쟁점

21세기 벽두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의 기본 명제는 여전히 '절차적 민주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명제는 사실상 안으로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2003년 고영구, 서동만 색깔론 시비에서 판정승은 그러한 파열음이 일어났음을 예증한다.

우리 사회에 구성되어 있는 담론을 성찰하면 모순적 사고가 존재함을 읽을 수 있다. 1980년대 전대협 운동권이 민주화세대로 불리는 데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한총련 운동권이 민주화세대로 불린다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견된다. 최근 1974년 '재건인민혁명당사건'으로 사형당한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1968년 '통일혁명당사건'으로 사형당한 사람이나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재조명 작업이 없다. 역사적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간첩' 조봉암에 대한 재조명 작업은 진행²⁶⁾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건국 직후 최대의 '간첩' 성시백에 대한 작업은 없다. 물론 재조명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다. 그 사건들이 모두 민주화운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라는 경계를 그어놓고 있는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인 사회적 합의(consensus)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 민주화운동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민주화운동 제외 대상의 범위를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시기(1969. 8. 7) 이전의 민주화활동 및 희생자(법 제2조)
-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법 제10조)
- 예) 불기소처분된 자, 불법연행된 자, 구금된 자, 수배자 등(법 제2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법 제18조)
- 민주화운동활동 사실 없이 단순히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
-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

26) 그 결과물로서 서중석의『조봉암과 1950년대』(1999); 정영태 외의『죽산 조봉암전집1-6』(1999); 박태균의『조봉암연구』(1995) 등이 발표되었다.

시기나 영역 문제-통일부문의 운동을 민주화운동에서 제외하는가 여부를 논의로 하고 본다면, 민주화운동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여부이다. 예를 들면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합 사건(김혜진, 1992)의 경우는 유신체제를 위협하는 대규모의 사건이었고 반정부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북한과의 경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민주화운동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1985년의 미문화원 점거농성투쟁 참가자들이 '반미'의 경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민주화운동으로서의 대중성을 획득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투쟁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서 김민석 전 국회의원이거나 신정훈 나주시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때는 좌경용공분자로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다. 소위 '빨갱이'가 대통령이 된 나라에서 과연 민주화와 반민주화, 또는 비민주화의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1970년대 민주화운동에는 반공주의적 인식이나 시각이 작동했던 것 같다. 1960년 4·19 당시 대학교수단이 "4·25시국선언문"에 "이북에서 호시탐탐 공산도배들이 제군의 의거를 백 퍼센트 선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인사들에게서도 반공 인식은 투철해 보인다. 당대 대표적 민주인사라고 할 수 있는 윤보선, 함석헌, 천관우, 지학순, 박형규, 정구영, 안병무, 조희순 등은 1977년 11월 11일, "현하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이 선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2. 최근 수년간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으로 투옥되어 있는 양심수는, 그들에 대한 적용 범위의 여하를 막론하고 전원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반공인사가 도리어 국가의 보안을 해친 것으로 처리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엮음, 1987: 1880; 밑줄은 글쓴이 주)

1980년대까지 많은 민주화인사들이나 사회운동가들이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에 저축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박원순, 1992). 1970년대 기독교계나 사회단체에서 나온 많은 성명서에는 '용공' 과는 선을 긋고, 무분별한 반공법 적용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런데 이 글을 조금 과장 해석한다면 민주화운동인사의 요건에는 '반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서중석이 지적한 대로 그들의 그러한 행위의 의도가 대중성 확보 차원인지, 개인의 세계관의 문제인지는 불확실하지만, 반공적 인식이 강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1983년 한완상의 글 속에도 '북괴'라는 용어로서 반공적 인식을 응변하고 있다(한완상 외, 1983).

민주화운동의 대표적 부문 운동의 하나인 노동운동은 분단국가 수립과정에서 반공주의를 천

명하며 시작되었다.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독립촉성회의 산하기구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을 모체로 하는 대한노총은 “반공청년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1년 출범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강령 제1조를 “반공”으로 삼았다. 1970년대 공장새마을운동을 반공운동 또는 교육의 일환으로 전개하였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2).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운동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반공주의와 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반공주의적 발전이데올로기에 동원되어야 했다. 일부 노동운동가들 속에서 자생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싹트고, 일부 지식인, 학생운동 출신자들에 의해 사회주의 사상이 도입되어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정치의식이 고양되어 가기도 했다. 그러나 분단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이 현실화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다(김동춘, 1995).

이러한 인식은 1990년대 초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 하나를 이태복의 “재야운동권은 이제 북한 노선과 분명히 결별하라”²⁷⁾에서 찾을 수 있다.

재야운동세력의 극히 일부가 북한당국의 시대착오적인 지하공작에 말려들어간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으로, 운동권의 변화와 쇄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공안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마치 재야운동세력 전체가 이들의 배후 조종과 지령에 따라 활동해온 것처럼 부풀려 발표하는 것을 우리는 엄중히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이태복, 1992).

1992년 대선 직전에 불어 닥친 김낙중과 중부노동당사건에 의해 진보정당의 출현은 10년 가까이 지연되어 2000년에야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 출범할 수 있었다. 1948년 이후 50년 가까운 현대사에서 계급정당으로서 진보정당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 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뿌리 깊은 보수이념과 지배 장치에 놓여져 있었다(정태운, 1992).

민주화운동의 기준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바로 미국관이다. 2003년 반핵반김국민대회와 같은 한국 냉전수구세력의 미국관에서도 보듯 그들에게는 “북한을 적으로 보느냐, 않느냐”, 또는 “미국을 친구로 보느냐, 않느냐”가 세상을 보는 기준이 된다.²⁸⁾ 이러한 극단적 친미주의자들에 대해 한홍구는 ‘후천성 반미결핍증’ 환자라고 시니컬하게 꼬집기도 한다(한홍구, 2003).

27) 『월간조선』, 1992.11월호.

28) “우익대표 논객 지만원 인터뷰”. 『월간말』, 2003.4월호.

그런데 미국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화운동단체들이나 개인들의 시각이 1980년을 계기로 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1970년대에만 해도 기독교 인사들은 물론 민주화운동인사들 중에도 적잖은 사람들이 미국을 우방국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였고, 한미관계의 정상화는 한국의 국제관계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엮음, 1987: 1880). 2000년대 들어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한반도의 반통일의 원천이자, 반평화의 원천이라는 주장(강정구, 2002)이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세를 이루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1970년대 중, 후반 당시 민주화운동 세력의 특징을 일면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은 1976년 미국의 카터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발표했을 당시 발생했다. 당시 한국 교계, 특히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잇달아 미국에 대해 간곡하게 북괴의 도발을 막고 한반도를 평화롭게 지켜달라며, 주한미군철수 반대서한을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등 국제사회에 보내고, 교계에서 주한미군 철수 반대 성명 활동을 전개하였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항쟁 이후 1982년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햇불을 들기 시작함 이래로 한국인들의 미국관은 반전되기 시작하였다. 1985, 1986년에는 '반미의 무풍지대'로 일컬어졌던 한국 수도의 한 복판에서 "양키고홈"이 울려 퍼졌다. 미문화원 점거농성 투쟁 집행부는 반미가 아니라 광주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반미의 꼬리를 감추었지만, 반미자주는 이후 사회운동의 중요한 구호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반미가 대중적이 된 것은 1980년대이기보다는 2000년대 이후이다. 특히 2002년 6월 13일의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이 도화선이 되었다.

대학생이나 사회운동가들만이 아니라 국민에게서도 변화된 미국관을 접할 수 있다. 중앙일보사가 1984년부터 1991년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미국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가깝게 지내야 할 나라'", "미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깝게 지내야 할 나라'" 의식 조사에서 인식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임희섭, 1994: 263). 급기야 2000년 이후 미국은 한반도 통일에 가장 비우호적인 나라로 꼽히고 있다. 과거 일본을 비우호적인 나라로 꼽던 인식과 비교하면 대미 인식이 급선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손봉숙 김은주, 2002; 김귀옥, 2003나).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미국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복잡한 것은 주한미군의 존재 여부의 문제만도 아니다. 1980년대 이래로 미국식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생활양식이 전형화되면서, 모든 한국인이 자본주의의 속도와 방식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세계관이자 삶의 방식이 되어 있다. 2003년 초 '네덜란드' 식 노사모델을 언급했다가 난타 당했던 어느 청와대 관료처럼 미국적이지 않은 사고, 미국적이지 않은 방식은 한국에 들어서기 힘들다. 이제 미국코드는

우리 삶의 밖에 존재하는 타자가 아니라, 생활양식으로 우리의 삶, 의식, 무의식에 내면화되어 오고 있다. 반공주의는 과거와 같은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물질 토대 위에 기초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세련된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이다.

5. 맺음말

한국사회에서 50년 이상을 지배해온 강력한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반공주의는 메두사(Medusa)와 같은 존재였다. 자유민주주의를 대의명분으로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맹목적인 반복주의라는 척도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친미사대주의의 해바라기적 속성과 발전이데올로기를 수족 삼아 한편으로는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을 동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배제하면서도 박정희식 국가발전주의로서 세상을 지배해 왔다. 반공주의는 뜻하지 않는 부산물로서 지역이데올로기를 낳았다. 그래서 반공주의를 쳐다보는 사람은 빨갱이, 좌경용공으로 붉은 낙인이 찍혔고, 그의 가족들은 연좌제라는 덫에 걸리게 되었다. 20세기말, 메두사로부터 인류를 구하리라고 예언되었던 페르세우스(Perseus)는 죽고 말았다. 부활한 메두사는 더욱 세련되고 강력하면서도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반공주의는 해방 이후 반복주의와 만나, 1970년대 극성기를 구가하였다. 그 시기 반공주의는 곧 반복주의였으나,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반복주의와 결별하기 시작하여 21세기 초 반복주의는 약화되고 있다. 반복주의의 기초였던 빨갱이, 즉 적색공포심은 사회주의 대국들의 몰락과 시장경제로의 급선회, 북한 경제의 침체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속에서 약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반도에서 냉전은 해체되지 않았으나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 의해 불어 닥친 탈냉전적 분위기 속에서 동족의식은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을 향하는 태도 속에 또 다른 시선이 자리 잡고 있다. 반복주의로서의 맹목적 반공주의가 약화된 자리를 현대판 반공주의가 차지해 가고 있다. 그것은 물질적 풍요에 기초한 소비지향의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후진적이며 비이성적인 북한식 사회주의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의 성격을 갖고 있다(김명섭, 2000).

과거 무소불위의 국가폭력을 휘둘렀던 반공주의는 분명 고사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세계화의 힘이 강해지고, 한국 사회에 자본주의가 강력히 뿌리를 내릴수록 반공주의는 합리성을 띠면서 정교화되고 있다. 그러한 반공주의는 과거 한국의 맹목적이며 비이성적 반복주의와는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반공주의 대립물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고 말하기 어렵다. 현대 반공주의는 '반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체계'라고 불러야 할 듯싶다. 그 체계

를 느슨하게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 (안병진, 2003)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냉전시대의 불행한 적자였던 반공주의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역시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자유주의는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20:80의 사회를 넘어서 10:90, 오래지 않아 1:99의 사회를 지향하게 될 만큼 자기포식적이고 무정부적이며 결국엔 인류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세계화 정신, 반신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 진정한 자주와 평등을 향한 운동, 세계민중들의 민주화운동은 계속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반세계화운동의 일환으로서 동시에 민주화운동으로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운동,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이 계속 될 것이다. 민주화는 기억되고 기념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²⁹⁾

참고문헌

경향일보사. 『경향일보』.
 동아일보사. 『동아일보』.
 스포츠투데이사. 『스포츠투데이』.
 연합뉴스사. 『연합뉴스』.
 월간말. 『월간말』
 월간조선사. 『월간조선』.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강만길. 1999. 『21세기사의 서론을 어떻게 쓸 것인가』. 삼인.
 강만길. 2000.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 역사비평사.
 강정구. 2002. 『민족의 생존권과 통일』. 당대.

29) 이번 글에서는 반공주의를 중심에 놓고 설명하였으므로 반공주의와 함께 다뤄져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인 분단이나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천사에는 주목하지 못했다.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한다.

- 김귀옥. 2000. “한국전쟁, 레드 콤플렉스, 학문의 자유”. 학술단체협의회 주최 『한국전쟁, 어떻게 끝낼 것인가』 발표문.
- 김귀옥. 2002[1999].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서울대출판부.
- 김귀옥. 2003가. “촛불시위의 사회학: 주한미군에 의한 효순 미선 사망 1주기에 즈음하여” 『진보평론』. 제17호.
- 김귀옥. 2003나. 『2002남북여성통일대회와 여성의 평화통일운동의 전망과 과제』. 한국여성단체연합 · 평화를만드는여성회(미출간본).
- 김동춘. 1995. 『한국사회 노동자 연구-1987년 이후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 김동춘. 1997. 『분단과 한국사회』. 역사비평사.
- 김동춘. 2000. 『전쟁과 사회』. 돌베개.
- 김명섭. 2000. “북한에 대한 오리엔탈리즘과 ‘햇볕’ 정책”. 『열린지성』. 가을 · 겨울호.
- 김정훈. 1999. “남북한 지배담론의 민족주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정훈 · 조희연. 2003. “지배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학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 김진경. 1988. “분단 이후 반공교육의 전개과정”. 『실천문학』 봄호.
- 김진균 · 조희연. 1985. “분단과 사회상황의 상관성에 관하여-분단의 정치사회학적 범주화를 위한 시론”. 『분단과 한국사회』. 까치.
- 김혜진. 1992. “박정희정권기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치경제학 기능” 『역사비평』. 통권16호(봄).
- 박원순. 1992. 『국가보안법연구』. 역사비평사.
- 박준성. 1992. “금강산담과 평화의담” 『동아대학보』.
- 박태균. 1995. 『조봉암연구』. 창작과비평사.
- 서병훈. 1999. “한국보수주의의 성격과 발전방향”. 김병국 외. 『한국의 보수주의』. 인간사랑.
- 서재진. 1995. 『또하나의 북한사회』. 나남출판.
- 서중석. 1997. “1960년 이후 학생운동의 특징과 역사적 공헌”. 『역사비평』. 통권39호(겨울호).
- 서중석. 1999. 『조봉암과 1950년대』. 역사비평사.
- 손봉숙 김은주. 2002. “남북협력기반조성과 여성의 통일 의식”.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논단』 발표문(12.6).
- 손호철. 1991. 『한국정치학의 새구상』. 풀빛.

- 안병진. 2003. "미국 신보수주의 집권의 아이러니". 『역사비평』. 통권64호(가을호)
- 원전 공산주의대계 편찬위원회. 1984. 『원전공산주의대계』. 극동문제연구소.
- 이경남. 1989. 『분단시대의 청년운동』. 삼성문화개발.
- 이명영. 1974. 『김일성열전: 그 전설과 신화의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 신문화사.
- 이명영. 1974. 『재만한인 공산주의운동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희섭. 1994. "해방후의 대미인식". 유영익 외. 『한국인의 대미인식』. 민음사.
- 정영태 외. 1999. 『죽산 조봉암전집1-6』. 세명서관.
- 정태윤. 1992. "한국에서 진보정당은 불가능한가". 『역사비평』. 통권18호(가을호)
- 조국. 2001.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 조희연. 1992. "사노맹: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사회주의노동자조직에 대한 철저 분석". 『역사비평』. 계간18호(가을호).
-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 · 민주주의 · 정치변동』. 당대.
- 중앙정보부. 1973. 『북한대남공작사』제2권. 중앙정보부.
- 진중권. 1998.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1』. 개마고원.
- 통일부 교류협력국. 2000.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2000.12.1~12.31)』 제 114호. 통일부.
- 과월전물장병유족위원회. 1968[1966]. 『방첩독본』. 반공문제연구소.
- 학문과 사상의 자유 탄압 및 학술연구자 불법연행 · 구속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1992. "6.27. 학문과 사상의 자유 탄압 및 학술연구자 불법연행 · 구속사태 관계 자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엮음. 1987. 『1970년대 민주화운동-기독교 인권운동을 중심으로-(III)』.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2. 『한국노총50년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완상. 1983. "4·19정신과 학생운동". 한완상 외. 『4·19혁명론I』. 일월서각.
- 한홍구. 2003. 『대한민국사: 단군에서 김두한까지』. 한겨레신문사.
- Chomsky, Noam, et al. 2001. 『냉전과 대화: 냉전의 서막과 미국의 지식인들』. 당대.
- Schrecker, Ellen. 1994. *The Age of McCarthyism*. Boston: Bedford Books of ST. Martin's Press.